

2022
5.2

KRIHS POLICY BRIEF
No. 863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방안



주요 내용

-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이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 2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나, '도시'라는 장소적 관점에서 보면 각 부처 정책 및 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여전히 한계
- 3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 4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공간 및 시설, 유관 경제·사회적 생태계를 상호 연계하는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전개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정책·사업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방안

- 1 도시형 그린뉴딜은 범부처 사업 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각종 도시·산업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일자리 생태계의 단계적 전환을 기조로 하여 노후 원도심 정비와 그린 인프라 확장, 탄소형 에너지 자립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등 패키지 사업 추진 가능
- 2 제3섹터는 공공·민간의 투자를 고려한 지역사업 발굴·기획과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운영·관리와 교육·홍보사업을 대행하는 사업 수행으로 자립을 위한 수익 모델 구축과 역할 확대를 꾀할 필요
- 3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의 효과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도시·지역 단위로 그린뉴딜 사업·재정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제3섹터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마련, 제3섹터의 그린뉴딜 관련 법적 지위 보장 등 시급

서민호 연구위원
조성철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이제욱 연구원

1

그린뉴딜 정책동향과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은 시대적 의무로,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 중 하나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채택하고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에 박차

- 그린뉴딜은 녹색·환경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신산업시장,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이정찬, 박종순, 안승만 외 2020)
- 그린뉴딜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였으며, 2019년 EU의 유로피안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2021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넷제로(Net Zero) 전략 추진을 통해 본격화
-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판 뉴딜 전략으로 그린뉴딜을 채택하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73.4조 원의 투자와 65.9만 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발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그린뉴딜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 추진 중

-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노후 어린이집 등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구축과 그린리모델링 추진, 국토·도시의 녹색생태계 회복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지원 확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 등
-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스마트 그린도시 및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추진과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 구축 등
- (산업통상자원부)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스마트 그린산업단지(기존 산업단지의 에너지 전환과 친환경화), 그린스마트스쿨, 에너지 관리 효율화 및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그린뉴딜의 핵심 추진대상인 ‘도시’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별 정책·사업의 산발적 추진과 사업 간 유기적 연계 미흡, 기획·시행·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에 한계 노출

- 그린뉴딜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 정책사업인 국토교통부의 탄소중립도시와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의 경우 도시 건물·인프라 탄소 저감 및 생태계 회복이라는 목적은 유사하나, 세부 사업대상이 각 부처의 소관 분야로 한정되어 도시라는 ‘장소’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대응과 ‘솔루션’ 제시에는 미흡
- 예를 들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제도는 4개 부처 18종으로 분리·운영되어 있고, 도시 내 교통 및 자동차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나 전기차 및 충전소 지원·운영은 환경부가 담당하며, 친환경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 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 기존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등 유사 정책대상·분야에서 사업·제도가 혼재되어 산발적으로 운영
-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공공건축물로 제한되어 전체 건축물의 약 97%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의 친환경 전환과 지원은 여전히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과의 협업뿐 아니라 사업 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GO 등 제3섹터¹⁾의 활용은 크게 고려되지 않음

공공의 그린뉴딜 정책 본격화 이전에도 제3섹터를 중심으로 도시·공동체적 노력이 있었으나, 공공의존적 사업모델이라는 한계와 사업영역 확대의 제도적 제약이 큼

- 서울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은 공동체 리더십에 기반하여 에너지 자립교육 프로그램과 그린리모델링, 일부 도시재생 사업을 결합 추진하고 지역금융 및 민간사업과의 연대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의 단기·일회성 지원에 의존하고 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단기적 사업을 전개하는 한계

1) 일반적으로 비영리단체나 비정부조직 등 공공(제1섹터)과 민간(제2섹터)으로 양분된 시장에서 두 영역의 경계에 있는 단체, 조직, 법인 등을 통칭하며, 최근에는 시민사회나 사회적경제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익 실현과 사회자본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의 주체 또는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음(김민준 2014).

표 1 서울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업분야별 주요 활동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자립·기후위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과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에너지 자립·기후위기에 대한 교육강사 양성 등 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물 및 에너지 분야 시설 개선/교체/설치 관련 사업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일러, 전구 등 건물의 에너지 관련 설비와 소모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자 인식 개선, 효율 등급이 우수한 장비로 교체 유도 등 태양광 설치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 마련(동작 실험 '우리집 솔라론')
지역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주민조직(조합, 법인 등)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설계/시공, 폐기물 순환, 교육 분야와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에 동참하는 비영리조직 설립 조합 간 협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관련 공공사업에 응모하여 재정적, 기술적 기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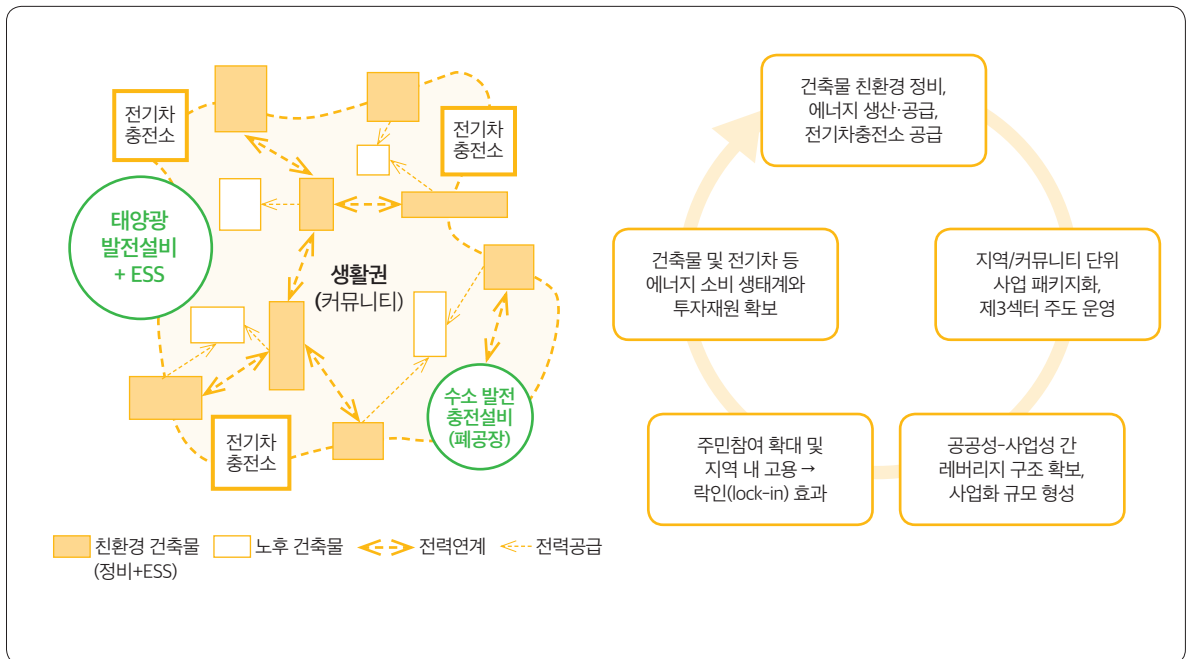
-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수익형 사업구조를 전제로 공공 지원을 통한 사업부지·자금 확보와 사업 거버넌스를 통해 안정적 사업기반과 역량을 확보하였으나, 최근 그린뉴딜 관련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별도 추진되면서 사업영역과 생태계적 역할 확대에 한계

표 2 제3섹터 운영주체로서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업의 취약점

취약 요인	주요 내용 및 사례
거버넌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사업모델에 따라 이해관계 충돌 및 주요 참여자 이탈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사업방식 및 투자	소규모 사업에 장기 상환을 가정하는 사업모델 탓에 공공주도형 사업추진 방식보다 높은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게 됨
법·제도	참여자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방향을 그려나가는 추진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계통망 연계 등 기술적 문제나 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그린뉴딜 관련 물리적 공간과 시설, 도시활동 및 경제·사회적 생태계의 연계와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할 필요

그림 1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 패키지(좌)와 생태계 형성 전략(우)



2

제3섹터를 활용한 선진국의 그린뉴딜 추진 사례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린뉴딜 추진에 있어 도시 차원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활용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민간·제3섹터의 역할 분담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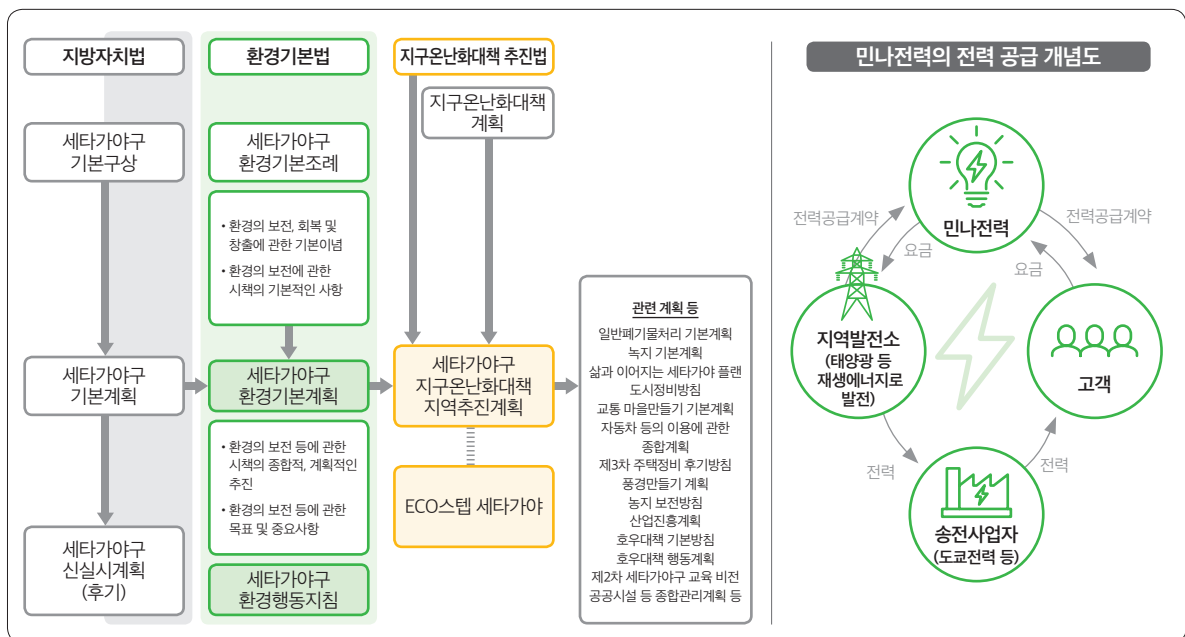
- 독일 등 EU 주요 국가들은 그린뉴딜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와 시민출자를 병행하고 있고, 추진과정상 사회시스템의 단계적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사업 발굴·지원과 공정전환기금을 활용한 공동체·일자리 지원을 병행

일본 세타가야: 지자체 환경기본계획과 제3섹터의 '모두의 에너지' 사업 추진

세타가야(世田谷)는 중앙-지자체-민간-지역사회의 정책 및 계획·사업이 법·제도적으로 체계화되고 주체별 책무와 방향성이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과 제3섹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과 유관 사업생태계를 구축·확대하면서 기술적 분야와 투자에 있어 민간협력을 꾀하고 있는 대표 사례임

- 세타가야는 제3섹터(비영리법인) '세타가야 모두의 에너지'(민나전력)가 그린뉴딜의 생태계·수익기반 마련을 주도하고 있으며, 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효과 모델'을 제시하고, ②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지역 어드바이저' 역할을 담당하며, ③ 도시 시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연구·개발 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2 일본 세타가야의 그린뉴딜 관련 주요 계획 간 관계(좌) 및 '세타가야 모두의 에너지' 운영 개념도(우)



출처: (좌)世田谷区 2018, 23; (우)한겨레 2016.

핀란드 칼라사타마: 스마트 칼라사타마와 제3섹터 주도 에너지 파일럿링 리빙랩

핀란드 칼라사타마(Kalasatama)는 에너지의 친환경 및 자립화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스마트 도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선도 유형 중 하나로, 공공·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을 시민과 제3섹터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특징이 있음

- 제3섹터가 주도하는 스마트 칼라사타마의 접근방식은 도시형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혁신적이고 지역사회 현안에 밀착된 사업 아이템이 활발하게 발굴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

- 칼라사타마의 제3섹터 모델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제도적인 인센티브와 참여의 장을 효과적으로 설계했던 것이 주효했고, 지구 중심부에 코워킹 스페이스 형태로 개방된 리빙랩(Urban Lab) 등의 거점공간을 만들어 시민참여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문화이자 의무로 수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 제3섹터 활용의 성공요인은 참여유인 설계, 개방형 참여공간, 운영기관의 전문역량, 민간기업 협업 사업화로 요약되며, 친환경 모빌리티 모바일 앱과 폐기물 순환시스템 등이 리빙랩으로 기획·사업화된 대표 사례임

3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과 제3섹터 활용 사업화 방안

‘도시형 그린뉴딜’은 물리적 공간과 시설, 도시활동 및 경제·사회적 생태계의 연계와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린뉴딜 관련 정책·사업을 패키지 형식으로 전개를 의미

- (노후 원도심 정비와 그린인프라 확장 패키지) 도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국토교통부+민간)과 도시계획적 바람길 조성(지자체), 쿨링포크·로드 사업을 통한 도심 열섬현상 대응(환경부), 친환경차 지원시설(환경부)과 도시숲(산림청)을 커뮤니티 단위로 운영(제3섹터)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도시공간·생태계를 지역 단위로 종합 개선
- (제조업 집적지 친환경 생산 및 자원재순환 패키지) 도심 유희부지와 노후 산업·기반시설(민간)에 태양광·수소 생산·충전설비와 공급망을 구축(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하여 개별 건물·차량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관리(제3섹터)하고, 지역 자원순환체계 형성(지자체)을 지원하는 일자리 전환 및 기술 교육, 캠페인 전개(제3섹터)

그림 3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 패키지와 제3섹터 활용 생태계 형성전략



제3섹터는 공공·민간을 고려한 지역 사업 발굴·기획 및 거버넌스를 조직·운영하며, 일부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교육·홍보사업을 대행하는 역할 수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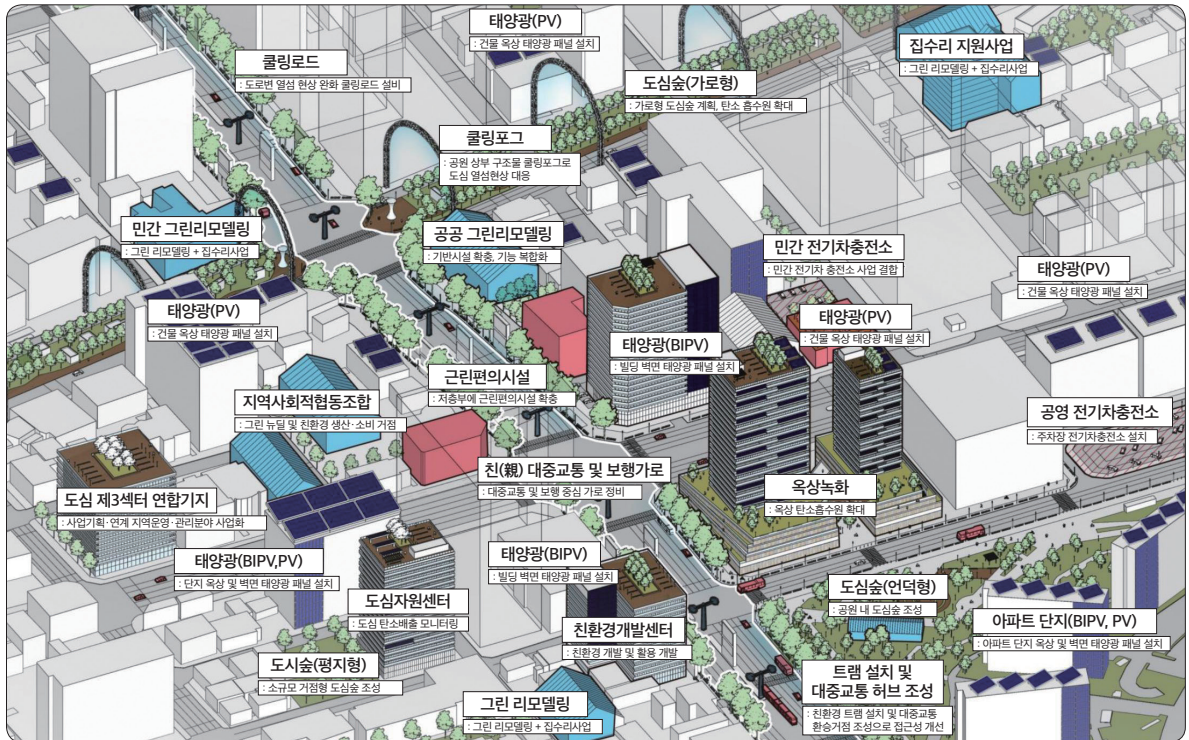
- (제3섹터 활용 거버넌스 사업) 지역 단위 그린뉴딜 추진 주체와 사업자, 공동체가 결합된 협의체 조직·운영, 사업 발굴, 커뮤니티 기반 친환경 리빙랩 및 교육·홍보센터 운영 등
- (제3섹터 활용 생태계 확장사업) 도시숲 등 탄소흡수원과 친환경상품협동조합 운영·관리 수익사업, 도시자원 순환센터와 지역 태양광발전 및 전기차충전 사회적기업 운영 등

표 3 도시형 그린뉴딜 주요 계획·사업 요소와 추진주체별 역할

구분	공공	민간	제3섹터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 인증 의무대상 및 기준의 단계적 상향·강화 ● 도시 내 국가 지원·보조사업의 건축 정비·개보수 시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 국·공유재산 친환경 활용 확대 ● 그린리모델링 저리 용자 확대 [민간 건물 보조금 지원(BIPV 및 노후 상가 리모델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탄소저감기술 고도화 ● 태양광 및 단열 관련 내외장재 시제품 모듈화 및 다각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 친환경 건축 시공 적정기술 노하우의 지역·공동체 전수 ◆ 친환경 건축 및 부동산 개발의 ESG 관련 리츠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지역) 탄소배출 모니터링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가능 건물 발굴 및 협의체 구성·운영 ● 그린리모델링+집수리사업 결합 현장 전개(사회적기업) ◆ 집수리·그린리모델링 인력 양성 및 지역 고용 채널 운영 ◆ 공유재산 친환경 개발·활용 크라우드 펀딩 운영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보조금 및 노후 경유차량 전환 지원규모 확대 및 추가 세원 발굴 ● 기존 주유소의 전기차충전소 전환 및 복합화 지원(제도) ● 도시 내 보행·대중교통 중심 가로 및 환승거점 구축 확대 ● 공유 모빌리티(PM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및 배터리기술 개발 및 고도화와 보급 확대 ● 기 구축된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소 전환 및 수익모델 다변화(레스토랑+휴게·편의) ● 생활권 단위 공유 모빌리티(PM, On-Demand Bus)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충전소 부지 발굴·매입 [공동체토지신탁(CLT) 또는 저이용·유휴 국·공유지 활용] ● 생활권 내 전기차충전소 운영 및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결합 (공공사업자 지위·권한 확보) ◆ 공유 모빌리티 민간사업자의 지역 내 관리 위탁 및 고용 중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노후 제조업 집적지의 단계적 정비 지원 제도 발굴 (토지이용 복합화, 인센티브) ● 노후 공장·설비의 친환경 전환·정비 저리 용자 지원 ◎ 공공의 태양광·수소 소형 발전소,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의 집적지역 우선 설치 ◆ 민간·공동체 협의체 및 지역 전환 프로그램 운영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공정의 친환경 전환 확대 ◎ 유희시설·토지의 친환경 시설 전환을 위한 토지주 참여 (태양광 발전을 위한 옥상공간 임대 또는 직접 시설 사업) ◆ 지역 내 태양광·수소발전 전력 소비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기업협의체 구성 ◆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또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집적지역 및 산업공정 탄소배출 모니터링 대행·협업 ◎ 집적지역 탄소중립형 전환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 태양광·수소발전 및 자원재순환 사업 결합 전개(사회적기업) ◎ 유희부지 발굴·활용 기획·협의 [탄소흡수원(도시숲, 소형발전)] ◆ 적정기술 노동자의 친환경기술교육 및 고용 전환 지원
자원 재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체(또는 생활권) 단위 자원순환실행계획 수립·이행 ◆ 공공의 자원재순환 설비 구축 ◆ 자원재순환 상품 공공 지원 및 보조금 확보·운영(환경 특화 지역화폐 및 바꾸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및 자원재순환 처리 및 공정 고도화 기술 개발 ◆ 자원재순환 재료 활용 사업 발굴 및 지역 내 활용 확대(페플라스틱 섬유, 3D 프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자원재순환 협의체 운영 및 공정·요소 모니터링 ◆ 환경 서포터즈 운영 및 자원 재순환 상품의 지역 내 소비 독려 ◆ 생활·정책 전환 리빙랩 운영 ◆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순환 관련 직업교육 및 고용 중개
에너지-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및 제3섹터 운영(직접PPA 확대) 제도 개선 및 재정 보조 ◎ 도시 내 기반시설 활용 탄소 흡수 및 열섬완화시설 확대 (도시숲, 쿨링로드·포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 및 투자(기업 비중은 50% 미만, 공공성 담보 유지 조건) ◎ 개인·기업 보유 토지·시설의 녹화(식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또는 공공임대 후 ESS·전기차충전소 결합 직접PPA 운영 (주민 조합 또는 크라우드 펀딩) ◎ 그린인프라(도시숲, 공원 등) BID 방식 운영 및 수익모델화

주: ● 에너지 전환 및 탄소 감축, ◎ 탄소흡수력 확대, ◆ 순환경제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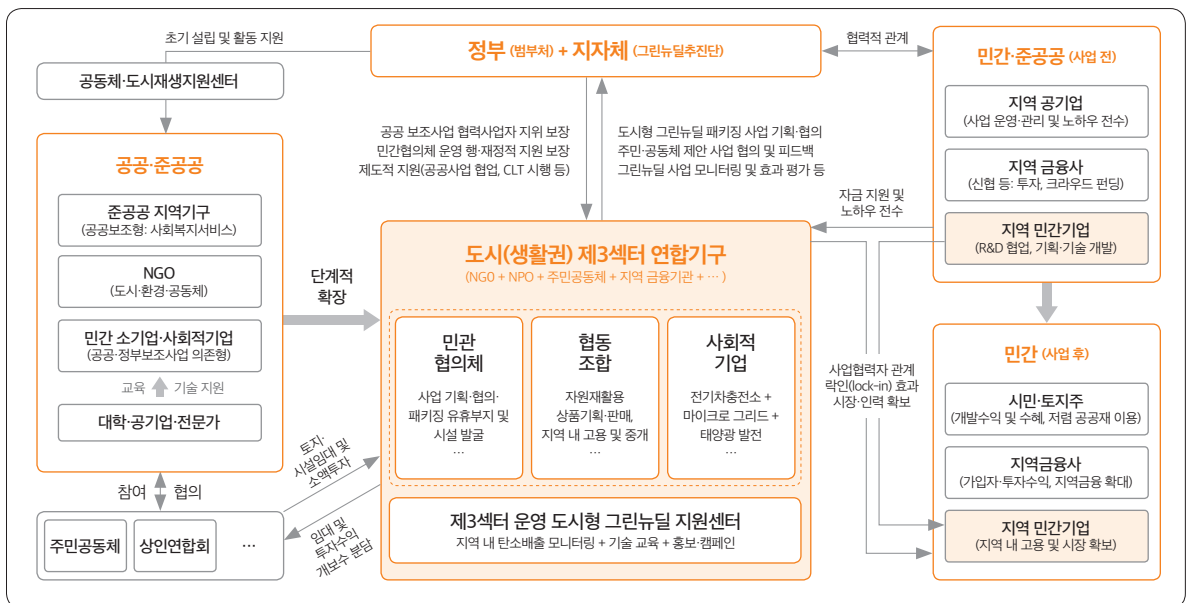
그림 4 장소중심형 도시형 그린뉴딜 정책사업 패키지 예시도: 노후 원도심 정비 및 그린인프라 확장사업 패키지



제3섹터는 지역단위 사업 기획과 운영, 현장 이슈 파악 및 주체 간 협업,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분야의 공공보조사업 경험 등에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준비·기획 - 사업구조 형성 - 개별 사업 확보 및 결합(패키지화) - 운영·관리 - 사업 확장 및 순환'의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이 가능함

- (사업 준비·기획) 도시 전역 및 생활권 단위(도심, 근린, 제조업 집적지)에서 그린뉴딜 관련 취약점과 현 상황을 분석·모니터링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현황과 장소(생활권)적 취약점을 연계하여 개선방향 기획, 우선사업협력자로서의 지위 확보와 그린뉴딜 사업의 실천 및 확대를 위한 공문화 형성에 주력

그림 5 제3섹터를 활용한 도시형 그린뉴딜 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조



- (사업구조 형성) 정부 및 민간 보조와 수익사업을 고려한 사업구조를 형성하여 우선사업대상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참여주체의 배분 및 일자리 규모 등을 산정하여 교육·역량 강화 및 구인을 시행하고, 운영·관리에 핵심 재원이 조달되는 앵커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등 법인화

- **(패키지화: 개별 사업 확보 및 결합)** 수익 확보 가능 사업을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 보조·지원 사업을 결합하여 도시형 그린뉴딜 생태계 확대에 주력하고, 민간·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독려할 크라우드 펀딩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투자·참여 프로그램 등 다각화
- **(운영·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주민 홍보 공간(커뮤니티시설, 교육장, 창업·협업 지원)과 체계(웹사이트, 모니터링·평가 모듈)의 구축·운영,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앵커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기업·주민·언론)의 협업·소통 협의체 형성·운영
- **(사업 확장 및 순환)** 앵커·시범·개별 사업의 성과와 편익을 분석·홍보하여 지속적인 주민·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제도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개선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하며, 제3섹터가 시민사회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사업 강화와 자체 수익원(마케팅, 브랜드 상품, 지역 컨설팅 등) 확보에 노력

4

도시형 그린뉴딜의 제3섹터 활용 제도 개선방안

도시형 그린뉴딜에 제3섹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 단위로 사업·재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체계와 지자체 중심의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마련, 제3섹터의 법·제도적 지위 보장이 시급함

- **(중앙정부)** 도시형 그린뉴딜의 장소 중심적 추진을 위해 사업대상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집약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 정비하고, 지자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지침 제시
 - 탄소중립도시 추진 지침 제정과 거점도시별 1개 이상의 특화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도시 단위 앵커링 효과를 유도하고, 지역 특화 및 역량 확보를 위해 제3섹터를 활용한 사업기획·운영체계와 공공·민간 협력체계 우선 정비
- **(지자체)** 그린뉴딜 계획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와 조직을 정비하고, 공공-민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등
 - 탄소중립도시 추진 관련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가칭)‘지속가능에너지공사’(SEU) 운영으로 사업 추진과 요금납부식 용자(OBF)를 활용한 녹색금융을 조달하며, 지역 금융과 협업한 민간의 자금 유치·활용 확대
- **(제3섹터)** 도시형 그린뉴딜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일자리 지원
 - 지역 NGO,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지위를 보장받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칭)‘그린뉴딜 지역협력자’ 제도를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운영하고, 공공보조사업의 운영·정산권한과 위탁범위·기간 확대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081> (2022년 4월 19일 검색).
- 김인춘. 2017. 제3섹터의 개념, 구성요소, 역할: 서구와 한국의 비교. 동서연구 제26권 제4호: 195-221.
- 이정찬, 박종순, 안승만, 조만석, 성선용, 이우진, 임인혁, 서정석. 2020.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뉴딜 추진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 한겨레. 2016. ‘얼굴이 보이는 발전소’, 일 민나전력의 새로운 실험, 5월 9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43083.html> (2022년 4월 19일 검색).
- 世田谷区. 世田谷区地球温暖化対策地域推進計画. <https://www.city.setagaya.lg.jp/mokujij/sumai/011/010/d00038749.html> (2022년 4월 19일 검색).

※ 이 브리프는 “서민호, 조성철, 신서경, 이정찬, 송정현, 황준호, 이제욱. 2021. 제3섹터를 활용한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방안. 세종: 국토연구원”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mhseo@krihs.re.kr, 044-960-0379)

• **조성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sccho@krihs.re.kr, 044-960-0153)

• **신서경**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jsshin@krihs.re.kr, 044-960-0327)

• **이제욱**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jewooklee@krihs.re.kr, 044-960-0194)

